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2025년 5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편집인: 이화수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51('25-5) | 2025. 4. 30

안보 위기의 심화와 초당적 안보 공론화
권영태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국제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대응
박진호

중국의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는 우리의 주권 침해 행위
이영석

안보 위기의 심화와 초당적 안보 공론화

권 영 태
(향군 논문·논단위원,
북한개발연구소 이사)

안보 위기의 심화와 패싱 우려

최근 몇 달 우리는 국내적으로 정국의 대혼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스러운 발언과 행보로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한국 패싱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우려스러웠던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 기조를 견지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언급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 패싱의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국방 영역뿐 아니라 관세정책처럼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우리의 경제 위기를 넘어 직간접으로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놓고 대북 제재의 한계를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계자가 있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위해 미북 관계를 악용한

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미국의 외교관계에서 북한을 완전히 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으나, 한국 패싱과 '딜'은 문제가 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협상의 입구가 아닌 출구로 삼아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틀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급변할 것이다. 대북 제재 완화, 북미 수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종전협정 등이 포함된 '나쁜 딜'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가 생존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심화되는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안보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트럼프와 김정은의 예상치 못한 합의가 몰고 올 충격은 너무나 클 수 있다. 그중 일부는 직간접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대응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관찰자로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북미 간의 그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칠 때이다. 지금은 국가적 생존을 위한 전 국민적 단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확산을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북정책과 외교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군에 대한 선진적인 문민통제 시스템 등을 한국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표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은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에서 교훈을 얻고 안보 선진국의 예도 참고하여 우리에게 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분단 시절 서독의 안보 인프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제복 입은 시민' 같은 일부 논의가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더 많은 연구와 함께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정책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안보 관련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당의 역할

북한 비핵화 협상,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초당적인 안보 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국민적 설득 논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안보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특히 핵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를 포함한 독자 핵무장의 정당성 검토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했으면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안보 해소 방안을 국제사회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NATO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 현실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외교안보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해 초당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결단과 실행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당연히 과거 독재 시대와 같은 동원적 발상은 옳지 않다.

우리 국민은 안보 문제를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와 안보 관련 단체들이 먼저 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각오가 시험대에 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참여, 국제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대응

박 진 호
(향군 논문·논단 심사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들어가는 말

2025년 5월 9일은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네오나치즘에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고, 그 전쟁에 2024년 10월부터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12월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이전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공식화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러시아 전승절 행사의 함의와 우리의 전략적 대안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의 의미와 국제정치 상황

러시아 전승절은 1945년 유럽 전역의 종전 기념일이다. 지금까지 과거를 기리는 동시에 당시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성격의 행사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올해 80주년 전승절은 북한군 참여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북·중·러의 도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오간스키(A. F. K. Organski)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에 따르면, 기존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세력이 부상할 때 세계질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 아래 비교적 안정된 국제질서가 유지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전, 그리고 북한의 군사 협력이 결합되면서 신 냉전 체제로의 진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단순한 세력균형 차원을 넘어 푸틴의 전쟁 명분인 '네오나치즘 대응'에 부합하는 복고적 이념 동맹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영토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가 진입한 쿠르스크 전선에 약 11,000명 규모의 북한 병력이 배치된 사실은 그 상징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연장선상에 북한을 위치시키려는 시도이자, 푸틴이 김정은을 전승국 리더 반열에 올리려는 정치적 연출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복심은 무엇인가?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원자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체제에 돌입해서 현재까지 수십~수백 발의 원자탄을 생산하여 전력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6년 초 4차 핵실험과 150Kt급 이상 위력을 입증한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개발을 발표했지만 아직 개발 완료 선언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수소탄 개발을 완성하지 못해 양산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메가톤급 수소탄을 보유한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인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뿐이다. 이들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원자탄 보유국과 달리, 메가톤급 살상 위력을 갖는 수소탄이라는 전략적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감행했던 핵실험은 모두 45Kt 이하로, 사실상 전술핵 수준에 머물렀으며, 일부는 1Kt 이하의 저출력 핵무기로 추정된다. 북한이 메가톤급 수소탄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분열-증폭-융합 과정에 고난도의 정밀한 증폭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이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대가로 이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 11월 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도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은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못했고, 2022년 5월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13개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다. 즉, 러시아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관하는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푸틴은 P-5 체제의 수정주의적 재편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중국 연대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3각 구조 형성이 유엔 내 영향력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승절 열병식에 푸틴과 김정은, 시진핑이 나란히 사열대에 등장한다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 전승국이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징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 반열에 올려세우는 방식으로 미국·영국·프랑스에 대응하는 자체 진영 구도(러시아·중국·북한)를 공고히 하려는 복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중국이 이 구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 국제정치의 지형은 보다 급격한 전환을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푸틴과 김정은은 오랜 기간 군사력과 정치공작을 결합한 복합 위협을 전개해 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국가안보 전략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의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 안보 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진영 간의 틈을 노려 시대착오를 일으키는 복고적 이념

전과 심리전을 시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결집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 러시아·중국·북한은 '네오나치즘 대응'이라는 구호를 반일 감정과 결합시켜 자유민주주의 진영 내부의 이념적 동조 가능성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국론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신중하고 정교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안보교육 체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펼치는 시대착오적 이념 혼란 공세에 국민이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및 유엔 등 국제 자유주의 체제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북한으로의 핵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경제적 보상이나 기술 이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수소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있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정은이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과 함께 열병식 사열대에 나란히 선다면 이는 P-5와 같은 핵보유국 지위의 국제적 인정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국민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국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 강화라는 전략적 틀 속에서 강력하고 일관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결코 관망할 수 없는 국제정치 전환기이며, 시대착오적 전체주의의 위협에 맞서 국가적 단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는 우리의 주권 침해 행위

이 영 석
(향균 논문·논단위원,
한국의병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불법 구조물 설치가 중국이 서해 공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로서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제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서해 설치 불법 구조물을 우려하는 이유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등 산호초로 이루어진 암초 3개소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시설로 사용해 왔다. 중국은 비행장과 미사일 발사대,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을 집중시키는 등 남중국해 확장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2024년부터는 중국이 만든 인공섬 3개소에 대한 확장은 물론, 이곳에 대형 해저터널을 만들어 미사일과 장갑차 등 군사 장비들을 추가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도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공섬을 기준으로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해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서해에 설치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이다.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은 우리의 서해와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겹치는 구역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이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관계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충돌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어업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상호 충돌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정구역 설정에 합의했다.

특히 이 구역에서는 어업 활동 이외의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을 금지하고, 자국 어선의 어업 활동에 대해 상호 협의한 조건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4월 2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설치한 불법 구조물은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석유시추선이라고 한다. 중국이 폐시추선을 사서 확대 개조한 뒤 '양어장 지원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여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어업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해상경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미니 인공섬'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서 미국 위성업체 스카이파이에 의뢰해 입수한 다수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크기는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라고 하였다. 구조물에는 'H'라고 쓰인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3개의 고정식 철제다리가 있고, 구조물의 동남쪽 3km 거리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5월 신식 양어장이라 주장하며 설치한 팔각형 철제 구조물인 '선란 2호'가 포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구조물 측면에는 '애틀랜틱 암스테르담(Atlantic Amsterdam)'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는 1982년 프랑스에서 건조돼 중동 등지에서 석유시추선으로 사용되다 2016년 폐기된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2014년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석유 시추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선과 인공섬 등으로 해양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서해 공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중국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으며, 특히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앞장서고 있다. 예비역 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3월 31일 향군 본회와 서울시회 등 약 200여 명의 회원이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변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항의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은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내외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서해에 대규모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중국이 해양경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서해를 중국의 영토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정부는 해당 구조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또한 정치권도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 대응하였다. 지난 3월 25일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를 열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형 불법 구조물 '선란'을 설치한 이후,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려던 한국 조사선 및 조사원을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분쟁 수역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깡패식 수법'이다"라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 역시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에 이어 서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중국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전략은 물리적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명확히 규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실질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도 중국의 서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통해 영향력을 넓힌 것처럼, 서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 영토 확장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어업 시설 설치가 아니라 '영토 확장의 전초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맺는말

우리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도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섣불리 대응할 경우 국익은 물론 우리의 안보 리스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와 민간에 의한 투트랙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관철시켜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등 민간단체가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정부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권을 주창할 때 중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봉착한 중국은 우리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익을 더욱 극대화하고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